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

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11. 24.(화)

한 총리, “맑고 깨끗한 공기와 푸른 하늘, 국민의 삶에 꼭 필요”

-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, **「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」** 의결, **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범부처 총력 대응** 당부

□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24일(화) 오후, 정부서울청사에서 **제20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***(공동위원장: 한성숙 국무총리, 민간위원장 이강웅 교수)를 주재하였다.

*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·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,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·민간 위원으로 구성(미세먼지법 제10조, 제11조)

○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**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**하기 위한 **「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*」**이 심의를 거쳐 **최종 확정**되었다.

*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철·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추가로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로, 2019년부터 시행 중

□ 한성숙 국무총리는 “미세먼지 없는 **맑고 깨끗한 공기와 푸른 하늘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**하다”며, “정부는 2019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, 국민과 기업의 동참으로 **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% 넘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**”고 밝혔다.

○ 이어 “그러나 외부 요인과 겨울철 기상 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”며, 정부의 노력과 함께 깨끗한 공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하였다.

□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“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, 최근에는 농도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”고 평가하고,

○ “이러한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완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”며, 관계부처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**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**에서는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**제7차 21.5㎍/㎥에서 19㎍/㎥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**로 정하였다.

○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,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과 함께 **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추진**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,

○ 이를 위해 개별 배출원 중심의 감시에서 벗어나 **대기질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**하고, 사업장 기술지원과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 등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□ 이번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핵심 배출원 감축·관리를 위하여 **대기질 통합관제센터를 설치**해 사업장 배출정보와 대기측정 자료를 통합 분석하고, AI·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**스마트 감시·단속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**한다. 또한, 다배출 사업장의 감축 이행을 강화(416→450개소)하는 한편, **영세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**은 중앙·지방정부가 함께 **132개소에서 776개소로 확대**하여 제공한다.

○ 국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를 위하여 산불 위험지역 순찰·감시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, 지하역사와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을 10%(5,000→5,500개소) 확대한다.

○ 전기차 구매지원 규모를 1.6조 원에서 2.1조 원으로(‘27년 정부안) 확대하고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의 화석연료 난방설비를 히트펌프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등 생활 부문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며,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에어코리아 앱을 통해 고농도 예보와 주의보·경보를 자동 안내한다.

□ 정부는 범정부 이행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,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와 국민 보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기획총괄과	책임자	과 장 홍연희 (044-200-2662)
		담당자	사무관 김진섭 (044-200-2389)
	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범수 (044-201-6860)
		담당자	서기관 임옥상 (044-201-772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요

□ 개 요

○ (법적근거)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~제11조

○ (기간) '19.2.15~'31.2.14(12년)

○ (기능) 미세먼지 주요사항 심의 및 정부·지자체 정책조정·지원

* △미세먼지 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이행상황 점검·평가, △미세먼지 계절관리제, △시·도 시행계획 평가, △미세먼지 저감·관리 및 정책 조정·지원 등

□ 위원회 구성 ※ 제3기 민간위원 임기 : 3년('25.4.25~'28.4.24)

○ (구성) 공동위원장(국무총리 + 대통령 지명 민간위원장) 포함 37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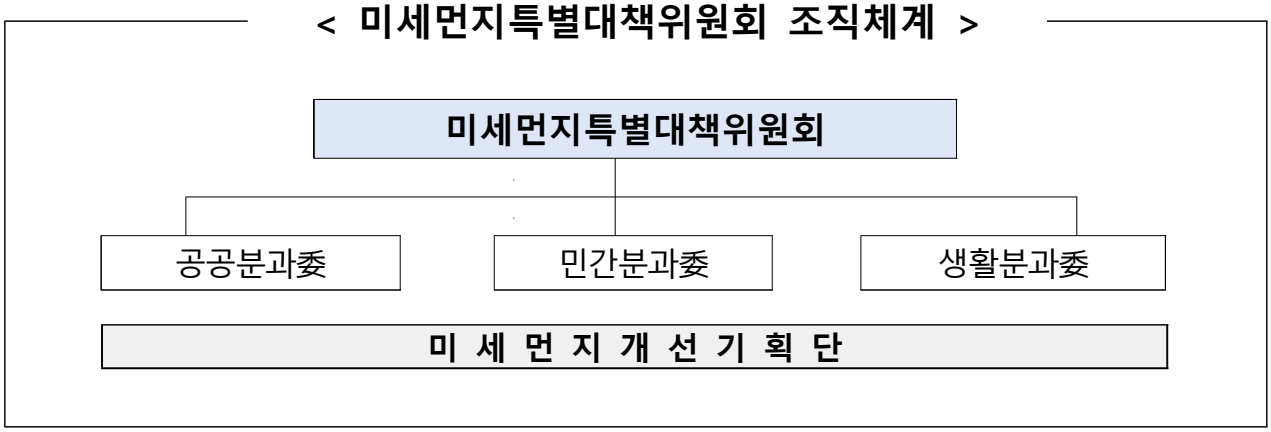
* 당연직(19) : 국무총리, 재경·과기·교육·외교·행안·문체·농식품·산업·복지·기후·노동·국토·해수·중기부 장관, 기획처장관, 국조실장, 산림·기상청 청장
위촉직(18) : 민간위원장, 미세먼지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(임기 3년, 1회 연임 가능)

- 민간위원 중심으로 3개 분과위*(공공·민간·생활) 구성·운영

* (공공 6명) 발전·항만·공항 등 공공영역의 저감과 한중협력·연구개발 등 분야 관장
(민간 6명) 제철·석유화학·건설 등 산업부문, 경유차 등 도로수송, 농업·농촌 등 민간영역 관장
(생활 5명) 실내공기질, 유치원·학교 등 취약계층 시설, 지하역사 등 일상 국민건강 관련 사항 관장

□ 조직 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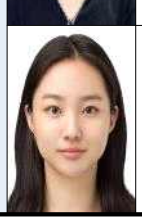
<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조직체계 >



별첨 **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 명단**

※ 위촉기간 : 3년('25.4.25~'28.4.24)

위원장		**이 강 웅 위원장** · 한국외대 환경학과 교수
공공분과위(6)		**김 종 호 분과위원장** · 한서대 환경토목건축학과 교수
		**전 혜 영** ·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
		**박 록 진** ·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
		**하 윤 희** ·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
		**김 화 진** ·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
		**김 동 철** ·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
민간분과위(6)		**김 진 영 분과위원장** ·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환경연구소장
		**송 창 근** · 울산과기원 탄소중립대학원 교수

민간분과위(6)		**최 유 진** · 서울연구원 지속가능연구실장
		**박 성 욱** ·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
		**김 정 일** ·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
		**오 기 웅** ·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
생활분과위(5)		**송 지 현 분과위원장** ·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
		**유 영** · 고려대 소아청소년과 교수
		**양 지 연** · 연세대 기후환경건강시스템과학연구소 연구교수
		**윤 지 로** · 기후에너지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
		**김 세 라** ·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

참고 2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

□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민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과 함께 주요 배출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축 실효성 확보에 집중한다.

○ 제8차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목표 농도는 19㎍/㎥로 설정하고,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은 약 13.7만 톤 감축한다.

※ 제7차 계절관리기간('25.12~'26.3)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1.5㎍/㎥

□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'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'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계절관리기간 특별대책 >

□ 첫째,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배출원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.

○ 산업부문은 한국환경공단에 「대기질 통합관제센터」를 설치하여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굴뚝자동측정기기(TMS), 사물인터넷(IoT), 대기환경측정망 자료를 미세먼지 예보와 함께 통합 분석한다. 이를 통해 고농도 지역과 비정상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하고 유역(지방)환경청과 지방정부에 신속하게 알려 현장 확인과 개선 조치가 이어지도록 한다.

○ 계절관리기간 중 유역(지방)환경청에 환경감시관을 추가 확보(53명)하고, 스마트 감시체계(이동측정차량+AI 분석)를 확대(수도권→전국)하여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보다 정밀하게 감시한다.

○ 대형사업장(450개소)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배출량보다 줄이는 저감조치를 시행하고, 굴뚝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감축 이행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. 또한,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(776개소)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방지시설 운영·유지관리 등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한다.

○ 공공 석탄발전은 전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최대 15기에서 18기까지 가동 정지하고, 최대 46기의 출력을 80%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. 또한, 공공·민간 석탄발전소는 저유황탄 사용과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한다.

○ 수송부문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 기준준수 점검을 강화(1,010→1,080척)하고, 4대 대형항만(부산, 인천, 여수·광양, 울산)에서는 선박의 저속운항 참여율을 79%로 확대한다. 또한,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비산먼지 관리실태도 합동점검한다.

○ 운행차는 배출가스·공회전 단속과 부실 자동차검사소 집중점검을 실시하고, 수도권과 6대 특·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. 계절관리기간 동안 전기차·수소차 전용주차구역 운영을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·산하기관에서 서울, 경기 등 4개 지방정부로 확대한다.

○ 공공부문(사업장, 공사장, 관용차량)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(관심)부터 2단계(주의) 수준으로 격상하여 시행(6개→7개 시도)한다. 공공발전·지역난방·자원회수시설 102개소는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, 공공기관은 적정실내온도 준수와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난방·전력 수요도 관리한다.

□ 둘째, 생활주변 오염을 예방하고 민감·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한다.

○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지역에 대한 순찰과 드론 감시를 강화하고, 산림 인접지역의 화목보일러 등 발화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.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취급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.

○ 농촌지역에서는 불법소각이 잦은 지역과 아침·저녁 시간대 감시를 강화한다. 집중관리기간(3월)에는 중점관리지역에서 농촌 전 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, 시·군 합동점검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.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, 폐농약용기류 보상금과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을 확대한다.

○ 생활공간 주변과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집중관리도로로 지정(751개 구간)해 하루 3회 이상 청소하고,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업체(18개사)의 현장 이행점검은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방진 덮개와 살수 등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현장 확인한다.

○ 지하역사와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확대(5,500개소)하여 환기·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관리·가동되는지 확인하고,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와 환승역을 우선 점검한다.

○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살피고, 장애유형별 학생 행동요령을 마련한다.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옥외노동자에게는 18개 언어로 건강보호 수칙을 제공하고, 고농도 시 옥외작업 최소화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의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.

□ **셋째, 대기질 정보제공을 확대하고, 국민참여와 국제협력을 강화한다.**

○ 에어코리아 앱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·경보와 고농도 예보를 자동으로 알리고,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한다. 대기환경측정망이 없는 지점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위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 8시간에서 24시간 연속으로 제공한다.

○ 겨울철·봄철 초미세먼지 계절전망과 함께 월 전망을 시범 운영한다. 중국과는 대기질 예보 정보를 매일 공유하고, 고농도 시기 대응계획과 조치사항, 성과를 교류한다. 특히, 한·중 환경협력센터를 거점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대기질 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.

○ 국민에게는 가까운 거리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, 사용하지 않는 조명과 전원 끄기, 겨울철 적정실내온도 유지, 영농폐기물·부산물 소각하지 않기 등 생활 속 실천을 안내하고,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행동을 연계한 홍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.

< 상시대책 관리 강화 >

□ **첫째, 핵심배출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, 수송부문 전동화를 촉진한다.**

○ 대기관리권역 내 다배출사업장은 2027년 배출허용총량을 전년 대비 약 7.3% 줄이고, 통합허가 재검토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배출기준을 강화한다. 또한, '우리동네 맑은공기 지원사업'으로 오염 우려 지역의 영세사업장에 기술진단, 방지시설 교체, 사후관리를 연계 지원한다.

○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*하고, 택시, 화물차 등 운수사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금을 지원한다. 이와 함께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차 전환 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송부문의 전동화를 촉진한다.

* ('26년) 30만대(1.6조 원) → ('27년) 43만대(2.1조 원) 지원(역대 최대 규모, 정부안)

○ 건설기계는 대기관리권역 내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 대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, 서울, 부산, 세종, 경기, 전북에서는 비의무 사업장(100억 원 미만)에 대해서도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(계약조건 등)을 확대한다. 또한, 무공해 농업기계와 충전시설을 연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농업부문의 전동화 기반을 마련한다.

□ **둘째, 생활부문의 친환경 전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.**

○ 주택의 화석연료 난방설비를 히트펌프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,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을 연계하여 보급*한다.

* 단독·공동주택('26년 2,580세대, '27년 정부안 11,700세대), 사회복지시설('26년 38개소, '27년 정부안 330개소)

○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공정을 진단하고 맞춤형 저감을 지원한다. 어린이집·유치원·요양시설 등에서는 롤러·붓칠과 같은 친환경 도장방식을 의무화하고, 2027년부터 친환경 도료 저감기술 개발('27~'29, 300억 원, 정부안)도 추진한다.

○ 비산먼지 민원이 잦거나 위반이 반복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, 수도권 대형 공사장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고농도 발생 시 담당 공무원과 공사장 관계자에게 알려 대응하도록 한다.

○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측정·컨설팅(650개소)과 시설 개선(60개소)을 지원한다.

□ **셋째, 과학적 분석을 고도화하고 지역 단위 저감정책을 지원한다.**

○ 항공관측과 고고도 관측망 등을 활용하여 국외 유입을 모니터링하고, 고농도 시 미세먼지 주요성분 분석 지점을 확대한다. 또한, 환경위성과 지상·상공 관측장비를 연계한 대기오염물질의 높이별 분포를 관측하여 고농도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.

○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지방정부에 지역 배출원 진단과 저감 대책 효과분석을 지원한다. 발전·산업 부문의 감축량 변화를 분석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발굴하고, 지역 여건에 맞는 추가 감축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< 이행관리 점검 및 재난 대응 >

□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, 위기경보 단계에 맞춰 사업장·공사장 가동 조정,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와 국민 보호조치를 시행한다.

□ 특히,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운영하여 부처와 지방정부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. 계절관리기간 종료 후에도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국민 보호조치를 이어가고, 이행 실적과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.

별첨 1 목표 및 기본체계

목표

초미세먼지 농도 7차 실적 21.5 → 8차 계획 19㎍/㎥ 개선

※ (계절제 시행에 의한 **추가 감축량**) PM-2.5 4,237톤(19%), SOx 39,134톤(46%), NOx 63,270톤(17%), VOCs 30,594톤(9%)

추진 방향

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과 함께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및 국가 경쟁력 확보

주요 과제

	계절관리기간 특별대책	상시대책 강화
핵심 배출원 감축 관리	**【산업·발전 부문】** ◈ 데이터 기반 통합 감시·대응체계 구축 ◈ 다배출 사업장 감축 이행관리 강화 ◈ 영세사업장 현장맞춤형 기술지원 대폭 확대 ◈ 석탄발전 가동 축소 및 운영 최적화 **【수송 부문】** ◈ 선박 및 항만 배출원 관리 강화 ◈ 운행차 및 자동차검사소 집중 단속 ◈ 노후 내연차량 운행제한 **【공공 부문】** ◈ 공공부문 선제적 배출저감 강화 ◈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	**【산업·발전 부문】** ◈ 다배출 사업장 총량 및 배출기준 강화 ◈ 우리동네 맑은 공기 지원사업 추진 **【수송 부문】** ◈ 화석연료 기반 내연차 전동화 가속 ◈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무공해 농업기계 보급
국민 생활 주변 집중 관리	◈ 산불 발생 예방 및 감시 강화 ◈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예방 및 처리지원 ◈ 생활주변 배출원 집중 관리 ◈ 미세먼지 민감·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	◈ 히트펌프 보급 확대로 난방방식 개선 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관리 강화 ◈ 비산먼지 주요 발생원 관리기반 강화 ◈ 다중이용시설 및 음식점 조리매연 관리 지원
과학 기반 강화 및 협력	◈ 고농도 예측·정보제공 고도화 ◈ 한·중 정책교류 및 협력 지속 ◈ 기후행동과 연계한 홍보 강화	◈ 과학 기반 대기질 감시 고도화 ◈ 지역별 배출 특성기반 맞춤형 대응 강화

별첨 2 제7·8차 계절관리제 주요 조치사항 비교

구분	제7차 계절관리제('25.12~'26.3)	제8차 계절관리제('26.12~'27.3)
핵심 배출원 감축 관리	**【특별대책】** · TMS, IoT 실시간 개별 감시 · 스마트 감시·단속 시범 운영(수도권) · 다배출사업장 배출저감(416개소) · 영세사업장 기술지원(기후부, 132개소) · 석탄발전(53기) 가동 축소* * 최대 17기 가동정지, 46기 상한제약 · 선박 황함유량 관리 단속(1,010척) · 5등급 차량 운행제한 · 전기·수소차 전용주차구역 운영(기후부) · 비상저감조치 수준 격상 운영(6개 시·도) **【상시대책】** · 승용 전기차 전환지원금 지원 · 관급 소형(100억원 미만)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(4개 시·도) ※ 관급 대형 전기 건설기계 사용 권고(6개 시도)	**【특별대책】** · 대기질 통합관제센터 운영 (新) · 스마트 감시·단속 본격 운영(전국) (新) · 다배출사업장 배출저감(450개소) 및 감축 이행 관리 (强)(新) ·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확대(기후부+시·도, 776개소) (强) * 기후부 147개소, 시도 629개소 · 석탄발전(52기) 가동 축소* (强) * 최대 15기~18기 가동정지, 46기 상한제약 · 선박 황함유량 관리 단속 확대(1,080척) (强) ·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속(수도권, 6대 특광역시) · 전기·수소차 전용주차구역 운영 확대(기후부+시·도) (强) · 비상저감조치 수준 격상 운영 확대(7개 시·도) (强) **【상시대책】** · 운수사업용 전기차 전환지원금 지원 (新) · 관급 소형(100억원 미만)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확대(5개 시·도) (强) ※ 관급 대형 전기 건설기계 사용 권고(12개 시·도) · 무공해 농업기계 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(新)
국민 생활 공간 집중	**【특별대책】** ·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(충청권) ·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(5,000개소) **【상시대책】** ·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(81개소)	**【특별대책】** · 산불 예방 활동 및 단속 강화 (新) ·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 전국 확대 (强) ·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(5,500개소) (强) **【상시대책】** · 히트펌프 보급('26~'27, 15천개소) (新) ·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확대(85개소) (强) · 친환경 도장방식 의무화(어린이집, 요양시설 등) 및 친환경도료 개발 (新)
과학 기반 강화 및 협력	**【특별대책】** · 겨울철·봄철 계절전망 · 한·중 협력* * 계절관리제 全 과정 정책 소통, 예보 정보 공유 등 · 대국민 홍보	**【특별대책】** · 고농도 정보 모바일앱 자동알림 서비스 (新) · 초미세먼지 월 전망 시범운영 (新) · 한·중 환경협력센터 대기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(新) · 기후행동과 연계한 홍보 추진

별첨 3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부처별 담당자 현황

연번	소 속	담당자 및 연락처
1	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기획총괄과	과장 홍연희, 사무관 김진섭 (044-200-2662, 2389)
2	재정경제부 녹색전환경제과	과장 김현영, 주무관 이예은 (044-215-4581, 4587)
3	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	과장 이찬영, 사무관 김창식 (044-202-4670, 4671)
4	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	과장 김창주, 사무관 연지혜 (044-203-6657, 6663)
5	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	과장 송다희, 행정관 김유진 (02-2100-7859, 7750)
6	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	과장 장형석, 수석전문관 김부생 (044-205-6360, 6369)
7	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	서기관 최복현, 주무관 이승현 (044-203-2291, 2290)
8	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	과장 하성태, 사무관 김록청 (044-201-2891, 2898)
9	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	과장 강은구, 주무관 권도형 (044-203-4240, 4248)
10	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	과장 김영아, 사무관 고윤권 (044-202-2860, 2863)
11	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	과장 김범수, 서기관 임옥상 (044-201-6860, 7722)
12	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	팀장 유종호, 사무관 박현건 (044-202-8890, 8891)
13	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	과장 안광열, 주무관 이상화 (044-201-3804, 3793)
14	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	과장 윤두한, 사무관 박혜진 (051-773-5280, 5289)
15	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담당관	과장 이형철, 사무관 장희수 (044-204-7420, 7336)
16	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	과장 진승우, 사무관 이재모 (044-214-1650, 1652)
17	산림청 도시숲경관과	과장 이홍대, 사무관 이예지 (042-481-4223, 4224)
18	기상청 기획재정담당관	과장 조남산, 사무관 손윤석 (042-481-7290, 7275)